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이금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임순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CONTENTS

NORTH KOREAN HUMAN RIGHTS

제3권 1호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08년 8월

발 행 2008년 8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스)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NEULPUM* (주) 늘품플러스

전화 070-7090-1177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1. 개별국가	3
2. 유엔	10
3. NGO	12
4. 분석 및 평가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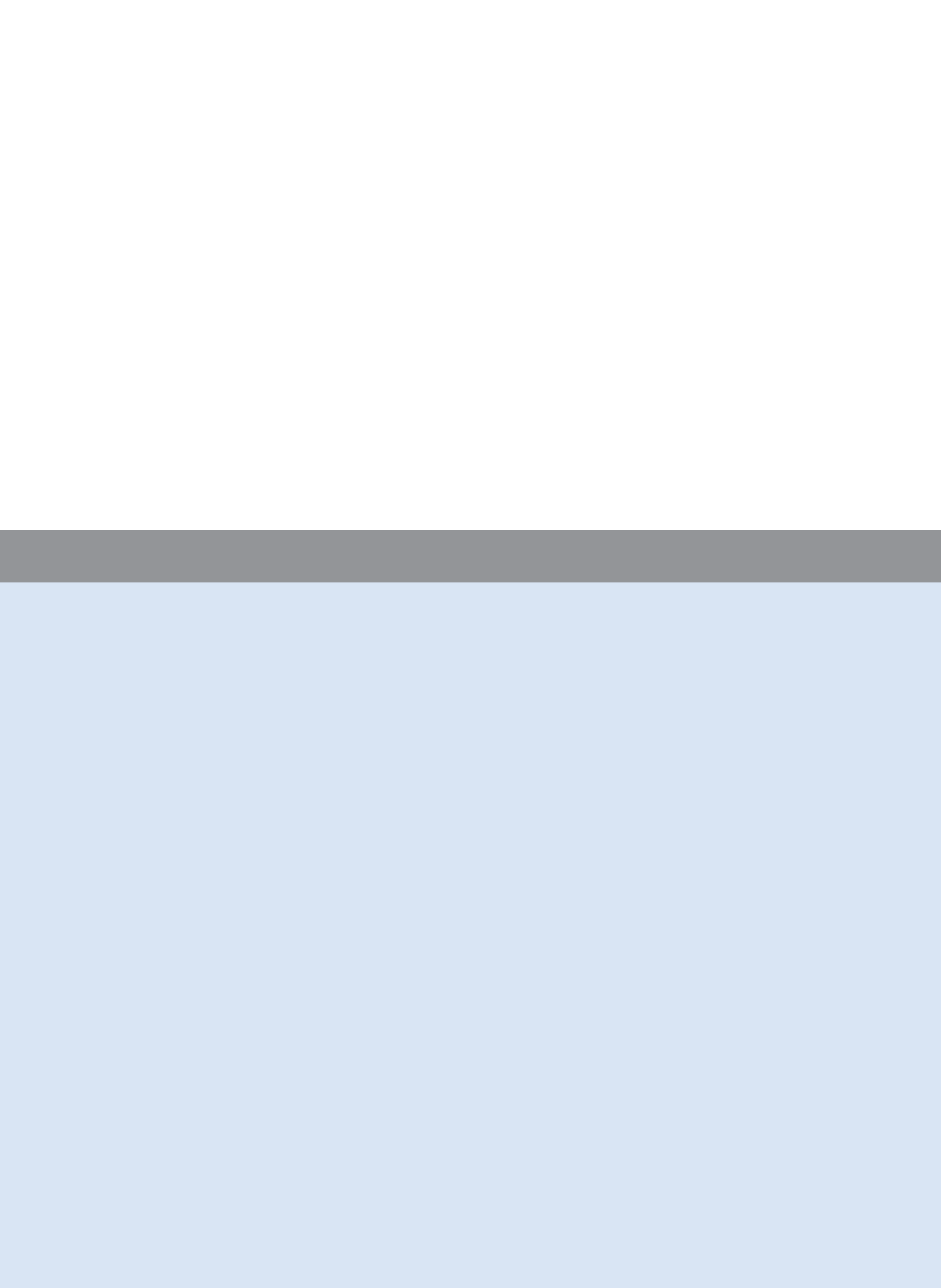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19
2. 일본에 대한 반응	21
3. 유엔에 대한 반응	24
4. 남한에 대한 반응	24
5. 분석 및 평가	28



|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31
2. 납북자·국군포로	35
3. 이산가족	38
4. 분석 및 평가	40





1. 개별국가	3
2. 유엔	10
3. NGO	12
4. 분석 및 평가	14

1. 개별국가

가. 미국

레프코위츠 특사, 북한인권 연계 주장(1.17)

- 레프코위츠 특사는 1월 17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과 경제지원, 안보문제를 모두 확고하게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미 국무부, 마크라곤 인신매매 퇴치담당 대사,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2.5)

- 마크라곤 대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핵문제가 우선 해결 정책이긴 하지만, “미국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묵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 발표(3.11)

- 미 국무부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07)에서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의 하나”이고,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가”라고 기술함.
- 억압적인 북한 정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이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모든 주민생활을 통제함.
 - 초법적 살인과 실종, 정치범 등에 대한 자의적 구금 등이 지속
- 북한 내 강제수용소에서는 임신한 여성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사산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함.
- 북한에는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별다른 법률이 없어 중국 등으로의 인신매매가 널리 자행되고 있음.
 - 일부 여성들은 가족이나 납치범들에 의해 중국 남성의 부인이나 첩으로 팔려가고 있다고 지적
- 이란, 시리아, 미얀마, 쿠바 등과 함께 북한을 10대 인권 위반국으로 지정함.
 - 북한을 ‘억압적인 정권’(The repressive North Korean regime), ‘독재체제’(Dictatorship)라고 표현

- 워싱턴 포스트 보도(3.5)에 의하면 미 국무부 내 '북한보고서' 표현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됨.
 - 인권문제를 다루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의 일부 표현에 대해 6자회담을 고려, 동아태국이 일부 표현을 수정할 것을 요청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북한인권 언급(4.9)

-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은 미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지구상의 어떤 사람들도 북한 주민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다"고 언급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종교자유보고서 발표(4.15)

-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탈북자 72명을 대상으로 종교자유 문제를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창살 없는 감옥—북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탈북자 증언'(A Prison Without Bars: Refugee and Defector Testimonie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2005년 발표한 '어버이 김일성 수령님 감사합니다—북한 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탄압 증대사례 증언록'이라는 보고서의 증보판
- 북한은 종교자유와 인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하는 나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함.
- 강제 송환된 탈북자 가운데 중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남한 사람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혹독한 심문과 고문, 가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힘.
 - 개종한 북한주민 및 중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주민을 붙잡기 위해 북한의 보안요원들이 중국 교회에 잠입, '가짜 기도회'를 열거나 '가짜 지하교회'를 세워 개종한 자를 적발
 - 국경수비대 및 보안기관을 통해 종교 활동 확산을 강력히 막고 있으며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가 체포된 사람에 대해 무거운 처벌
-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절대적 숭배의무는 학교와 미디어, 직장 등지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변함없이 '주입' 되고 있음.

- 종교 서적, 비디오, 기록의 반입 및 선교사의 활동이 중국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등 비밀리에 열리는 종교 활동이 증가함.
- 북한이 근래 들어 교육 체계 및 매스미디어, 직장 등을 통해 반종교 선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힘.

제4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개최(4.23·28)

- 제4회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워싱턴에서 개최됨.
 - ‘자국민 보호실패’ 토론회, 탈북자와 탈북 지원운동가의 인권탄압에 대한 의회 청문회, 북한의 종교탄압에 관한 토론회, 북한과 탈북자들을 위한 기도회 개최

부시 대통령, 북한인권자유주간 행사에 메시지 전달(4.30)

- 부시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탄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찾아주겠다는 결의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 언젠가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국에서는 존엄과 자유와 번영 안에서 살고, 인근 나라들과는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강조
 - 미국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찾기 위한 북한 주민들의 투쟁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 하원 통과(4.30)

- 하원 외교위원회는 2008년 9월 말로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을 통과시킴.
 - 미 하원 본회의 통과(5.3)
- 재승인법안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담고 있음.
 -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
 -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금을 종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상향
 -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신원조회 등 수속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고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대사나 미국 고위 관리들과의 협력 강화

- 탈북자들의 진로와 재정착을 위해 한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례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5.2)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08 연례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수단 등 11개국을 종교의 자유와 신조를 억압하는 특별우려대상국(CPCs)으로 지정함.
- 북한 정권은 종교를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싸워야 할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정부는 사적·공적 종교 활동을 가혹하게 억압
 - 기독교를 믿거나 한국교회와 접촉한 환 탈북자에 대해 장기구금, 혹독한 취조 등 가혹하게 처벌
 -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 간 접촉으로 북한 내 종교 활동이 왕성해 지는 것을 억압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착수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대북방송시설 제공과 자금지원 언급(5.5)

-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 일간지 '뉴욕 선' (The New York Sun)에 기고한 '왜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Why North Koreans need us)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 당국의 정보 차단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시설을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북한 당국의 정보 차단에도 불구하고 최근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절반 정도의 북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외부 방송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 언급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 대북 인도지원 언급(5.6)

- 레프코위츠 특사는 워싱턴에서 동아일보와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잠재적 기아위기에 직면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긴급하다고 표명함.
 -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여국은 분배모니터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
 -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한국과 중국은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북한 종교 문제 언급(5.7)

- 매케인 대선 후보는 중국, 이란, 미얀마, 수단, 북한 등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지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함.

미 국무부, 연례인신매매보고서 발표(6.4)

- 미국은 각국의 인신매매 수준을 1등급, 2등급, 주의요망 2등급, 3등급 등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북한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상(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낮은 3등급(Tier 3)으로 분류됨.
-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이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위험지역이라고 지적함.
 - 북한은 강제노동과 매춘을 위한 인신매매 인력을 제공하는 국가이며 가장 대표적인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넘어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발생
- 연례인신매매보고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부양하려다가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려가는 '북한판 효녀 심청' 소영 양의 사연을 소개함.
 - 150cm도 되지 않는 19세의 북한 여성 소영은 더 나은 생활을 기대하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었지만 성(性) 착취에 시달리는 처참한 생활
 - 탈북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의 심각성을 전반적으로 기술하던 기존의 보고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이들 여성들의 기구한 참상을 구체적으로 소개
- 북한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5만~20만 명이 재교육을 명목으로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음.
- 북한은 또 해외에 있는 북한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1만~1만 5천명의 계약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데, 거주이전과 통신의 제약을 받는 등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음.

나. 유럽연합

노르웨이 정부, 탈북자 망명 허용 감소

- 미국의 소리방송(3.17)은 2007년 노르웨이에 탈북자 72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7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아 거주권을 발급받았다고 보도함.

영국 정부, 탈북자 망명 허용 감소

- 미국의 소리방송(3.18)은 2007년 영국이 망명을 신청한 415명 가운데 130명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거주권을 발급하였다고 보도함.
 - 점차 탈북자 망명 허용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함.

영국 외무성, 연례인권보고서 발표(3.28)

- 영국 외무성은 '2007년 연례인권보고서' (Human Rights Report 2007)에서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21개국을 주요 인권우려국가로 지정함.
- 지도자와 정부의 교체 불가능, 종교의 자유 부인, 노동자의 권리 부재, 여성 차별과 가부장적 문화, 핵심계층만 특혜를 누리는 성분제도, 아동 권리의 무시, 재판 없는 체포와 구금 등의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함.
- 북한이 영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한 완전하고 정상적인 양자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북한에 제공해 줄 수 없다고 밝힘.

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북한인권문제 언급(2.1)

- 이명박 대통령은 동아일보·월스트리트 저널·아사히신문이 참여한 3국 공동기자 회견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 “차기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거론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급한 것은 빵이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도와주면서 인권문제를 등한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라고 언급

북한인권 개선, 핵심국정과제로 설정(2.5)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핵심국정과제로 설정함.
 -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라는 핵심국정과제는 북한인권문제 해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자 문제를 포괄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정부 북한인권문제 언급(3.3)

-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세션 기조연설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call upon)”고 밝힘.

이명박 대통령, 북한인권 언급(3.11)

-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의 인간적, 보편적 행복의 기준을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사람이 어느 곳에서 어느 위치에서 태어나든 최소한의 기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언급

통일부 2006년 업무보고, 북한인권 개선 과제 설정(3.26)

- 통일부는 2008년 실행계획에서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남북주민의 행복 추구)을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함.
 - ‘북한인권 개선 노력’,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대북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가 12대 과제에 구체적으로 포함

정부, 북한인권보고관 임기 연장 유엔 결의안에 찬성(3.29)

-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찬성함.

진보신당, 북한인권정책 발표(3.30)

- 진보신당은 총선을 앞두고 북한인권정책을 발표함.
 -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의 인도적 문제 해결
 - 한반도 인권향상을 위한 남북 인권대화 채널 마련
 - 남북 노동협약 추진
 - 관광지구에 이산가족 실버타운건설 및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정기적 상봉 제도화 등

이명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 논의(4.16)

- 이명박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방문, 분단된 한반도의 핵과 인권문제,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함.
 - 반기문 총장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조해 탈북자들이 유엔 헌장이 규정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김하중 통일부 장관, 북한인권 거론(4.29)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제사회에서 인권대회나 여러 기회에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표명함.
 -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전략적 차원이 아니고 인류 보편적 가치로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 개최(5.20)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실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북한인권 활동가로 '북한인권포럼'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함.

2. 유엔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서 제출(2.15)

- 문타본 보고서는 크게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 당국(주체네바 북한대표부 포함)과의 통신(서신 교환) 내용, 조사를 위한 현지국가 방문 내용,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권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4대 국제인권조약 가입국으로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규약위원회에 북한대표가 참석한 것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건설적인 측면으로 평가함.
- 북한 개발과정에서 인권이 반영되지 않는 불공평 요소 지적함.
 -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로 인한 불공평성
 - 정권생존 차원에서의 이념편향적인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불공평한 개발방식 가속화

-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부재: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요소로 주민참여 강조
- 엘리트의 식량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접근권과 일반주민의 생존수단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매우 커다란 불균형 요소가 지속적으로 작동함.
 - 국가가 제공하는 자원에 대한 엘리트의 우선권
- 정권에 의한 억압, 협박 및 광범위한 정보체계 등 주민들의 신변불안을 야기하는 요소 등으로 인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 당함.
- 북한 당국은 국가통제 수단으로 이동을 엄격하게 규율함.
 - 허가 없이 국내외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면서, 이동불가 정책의 의미 퇴색
 - 북한 내 특별경제구역 혹은 노동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 간 협약에 의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노동자가 발생하기 시작
- 북한헌법은 남녀 차별금지 및 평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커다란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 북한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는 장기간 인권침해가 존재 혹은 지속하도록 한 무처벌(impunity) 요소를 다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연장 결의안 채택(3.27)

- 유엔 인권이사회는 6월 말로 종료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2009년 6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중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8표로 채택
-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보고관과 협력하며, 북한방문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함.
-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인도적 지원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함.

비릿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인권문제 언급(4.10)

- 문타본 보고관은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인터뷰(4.10)에서 북한에서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주민들의 인권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 식량 부족으로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적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
-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도 최근 더욱 가혹해지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3. NGO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2008 세계의 자유’ 연례보고서 발표(1.16)

- 프리덤하우스는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비자유국가군(Not Free)으로 분류하고,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 모두 최하위 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하였음.
 - 선진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음.
 -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
 - 수많은 정치범이 존재함.

제8회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 개최(1.22)

-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고려대 국제대학원, 영국의 채텀하우스, 노르웨이의 라프토인권재단이 공동으로 런던 채텀 하우스에서 제8회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를 개최함.
 - ‘북한: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북한 사람들의 사고 변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안보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해법)의 가능성 등을 논의

휴먼라이츠워치(HRW), 연례인권보고서 발표(2.1)

-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 국경지역 경비 강화.
 - 최근(2006~2007) 발생한 홍수에 따른 기근과 생활고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당국의 체포

및 강제복송을 피해 숨어살고 있음.

– 국경지대에서 북한 여성들의 인신매매 지속

- 일부 탈북자들은 중국당국의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태국, 베트남 등으로 재탈출, 한국이나 일본, 미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대기하고 있음.

국경없는 기자회(RSF), ‘2008 세계 언론자유 연례보고서’ 발표(2.18)

- 북한 언론은 여전히 독재자 김정일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으며, 외부세계와 통신을 시도해 처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 외국 라디오 방송이 방송 시간을 늘려 북한 보도를 확대하는 것에 맞서, 북한 당국이 지난해 5월11일 전파 방해를 재개했다고 언급함.

국경없는 기자회(RSF), 인터넷 적대국에 대한 전세계 온라인 시위 개최(3.14)

-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온라인 시위 행사를 개최함.
- 국경없는 기자회의 웹사이트 공간에 만들어진 북한, 미얀마, 중국 등 9개 인터넷 적대국가 중 하나를 선택한 후 그 개별국가에 해당하는 5개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2008년 연례보고서’ 발표(5.28)

- 북한 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 인권조사관들의 입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외부세계와 차단을 강화하고 있음.
-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정치범과 경제사범에 대해 교수형이나 총살의 형태로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된다고 지적함.
- 매달 수백 명의 탈북 주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음.
 - 5만여 명의 탈북자가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에서 은신 생활
- 북한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음.
 - 허가받지 않은 집회와 조합은 ‘집단 동요’로 간주하여 처벌
 - 개인적인 종교 활동을 할 경우 구금돼 고문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하기도 함.

- 2007년 4월 조선노동당은 외국으로부터 어떤 비디오테이프·문건·이동전화·CD의 유입도 봉쇄하라는 지시를 하달함.

4. 분석 및 평가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책임론 및 처벌문제 부각

- 국제NGO를 중심으로 북한 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당국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문타본 보고관도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현상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비처벌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금년도 보고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음.
 - 시민사회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국의 처벌을 강조하는 활동 소개
 - 인권침해자에 대한 비처벌이 북한 내 지속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초래
- 문타본 보고관은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무성 강조함.
 - 국내 차원에서 법집행 관리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
- 국제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입 조치 언급함.
 - 국제 차원에서 국가의 책무성, 개인의 범죄에 대한 책임성 강조

개발과 인권의 조화 강조

- 2008년도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보고서에 문타본 보고관은 북한의 개발이 인권개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음.
 - 북한의 경우 개발에 대한 정보 빈약
- 개발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 공평성 부재와 선군정치에 따른 군사화로 인해 개발이 인권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함.

북한인권법 시효 만료에 따른 연장 법안 미 하원 통과

- 2004년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금년 9월로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 하원에서 2012년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재승인법안' 이 제출되어 본회의를

통과함.

- 현 북한인권법과 커다란 차이가 없으나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탈북자 보호 조항 강화
- 금명간 미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표명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여 오고 있음.
 - 북한인권을 포괄하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핵심국정과제로 설정
 - 통일부 2008년 실행계획에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12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
 -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략적 차원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할 말은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 유엔의 북한인권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
 -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촉구
 - 비탄 문타본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표결

미국, 영국 정부 차원의 연례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국으로 지정

- 미국 국무부는 연례각국인권보고서, 인신매매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내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부각함.
 - 연례각국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10대 인권유린국의 하나로 지정
 -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으로 지정
 -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특별우려대상국으로 지정
- 영국 외무성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21대 인권유린국의 하나로 지정함.

미국 내 핵문제 해결과 북한인권개선을 둘러싼 입장 차이 노정

- 연례각국인권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 내에서 입장 차이가 노정된 것으로 알려짐.
 - 인권·민주주의·노동국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해 동아태국에서 일부 표현에 대해 수정을 요청

유럽국가들 탈북자 망명에 대한 엄격한 심사

-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들은 2007년도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용 규모가 대폭 감소함.

NGO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속

- 국제NGO들은 연례보고서 등에서 북한인권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함.
 - 프리덤하우스는 비자유국가군으로 분류하면서 시민적 자유, 정치적 권리 모두 최하위 등급인 7등급으로 분류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도 북한 당국의 심각한 언론 자유 제약을 지적, 인터넷 언론 적대국으로 분류
 -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도 북한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평가

북한의 대응



1. 미국에 대한 반응	19
2. 일본에 대한 반응	21
3. 유엔에 대한 반응	24
4. 남한에 대한 반응	24
5. 분석 및 평가	28

1. 미국에 대한 반응

로동신문, 미국의 이라크 주민 인권침해 비난(1.23)

- 미국은 “세계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쟁을 감행” 하였으며, 이로써 “무고한 이라크 인민들”에 대한 “첫째가는 인권유린자, 인권범죄의 왕초로서의 미국의 추악한 정체”가 드러났는바, “인권범죄의 주범인 미국을 응당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어 죄를 따지고 벌을 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함.
 - “이라크 침략전쟁에 합세한 유럽동맹 등 서방나라들”이 “미국의 특대형 인권 유린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면서 북한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터무니 없이 시비해 나서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며, “인권의 정치화, 이중기준, 선택성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비난

조선신보, ‘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의 연계 주장’ 강력 배격(2.1)

- 북한 당국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미국의 레프코위츠 《북조선 인권담당 특사》가 핵문제를 인권, 경제문제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는바, “비핵화 과정이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오늘 그 누구도 책임질 수없는 발언으로 초점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당사국들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로동신문, 중국보도 인용 미국 연례인권보고서 비난(3.8).

- 중국 외교부장은 담화를 통해 연례인권보고서를 “랭전식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비난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중기준을 강요하며 그것을 구실로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함.

민주조선, 미국 연례인권보고서 비난 및 발표 중지 요구(3.18)

- 또한 중국은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에 대응하여 발표한 《2007년 미국의 인권기록》에서 미국의 인권실태를 폭로단죄” 하였으며, “미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국제적으로 인권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열거”하고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함.
 - 러시아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의 허황성”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저들이 저지른 전범죄와 대중적인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현실을 외곡하여 논평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고 반문

-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수리아, 쿠웨이트, 도미니카, 수단, 라오스, 이집트, 볼리비아 등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연례보고서 발표를 자국에 대한 “불법무도한 내정간섭행위”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대내외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했다고 설명

로동신문, 미국의 대테러전 비난(5.30)

- “침략적인 《반테러전》의 미명하게 감행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쟁은 극악한 인권유린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세상에 낱알이 고발하는 산 증거”라고 주장함.
 - 미국의 “이라크 아부그라이브형무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인권유린 만행”과 “《테러분자소탕》의 미명하에 이라크인들에 대한 횡포한 군사적 탄압과 살육만행” 비난

로동신문,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 발표 비난(5.30)

-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인권문제》를 침략적 대외정책 실현의 주요 수단의 하나로 삼고 반제자주적인 나라들,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인권》공제를 악랄하게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함.
 -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인민들의 자주성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 밑에 정당화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한다고 비난

민주조선, HRW 보고서 인용 미국의 인권상황 비판(6.13)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성명 발표(6.6)를 통해 “미국에서 수감자수가 계속 늘어나 최악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첫째가는 《감옥국가》이라고 비평하였다”고 밝힘.
 - “미국에서 현재 인구 10만 명 당 수감자 수가 762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며 미국력사상 최고기록”이라고 설명

로동신문, 미국의 미성년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비난(6.26)

- 영국의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성원들이 미국이 관타나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두고 있는 감옥들에 미성년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미군의 잔인한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그들은 미성년 수감자들이 비합법적인 적의 전투원들로 취급당하고 군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데 대해 진심으로 우려한다”고 보도함.
 - “인권유린왕초인 미국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걸고 내정간섭행위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격에 어울리지 않는 파렴치한 짓”이라고 비난

2. 일본에 대한 반응

조선신보, 총련에 대한 ‘정치탄압’ 및 ‘인권유린 행위’ 규탄(2.1)

- “교토부 경찰당국은 1월 21일과 22일 아침, 이른바 《세리사범위반》을 구실로 백수십 명의 경찰관과 수사원을 동원하여 교토부 상공회관과 산탄상공회, 총련 산탄지부와 개별일군자택을 비롯한 15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색을 단행하였으며 현직일군을 부당 체포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비난함.
 - “이런 강제수색은 작년 11월의 산탄조직에 대한 부당수색에 이어 감행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며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

로동신문, 재일교포 정치탄압 규탄행사 보도(2.4)

- “교토부 상공회에 대한 일본 경찰당국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 교포대회와 시위행진이 2일 교토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대회에는 총련 중앙·지역일군들과 상공인들을 비롯한 동포들, 청년학생들 외에도 “일조우호촉진교포부인회, 《아시아공동행동교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교포위원회 등 12개의 일본단체 대표들”이 참가

조선신보, ‘일본의 《위안부》 범죄의 진상을 폭로단죄하는 고발장’ 발표(2.6)

- 고발장 발표 이유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은 “일본반동들이 관권과 군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감행한 랍치범죄에 대해 배상할 대신 이미 해결된 랍치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조선인민과 세계량심에 대한 우롱이며 도전”이라고 밝힘.

- 고발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범죄가 왕의 명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군부, 조선총독부와 그 산하 경찰 등이 총동원 되어 감행된 국가범죄”라고 규탄함.
 - “어린 소녀들과 애기 어머니, 약혼녀까지 납치, 강제연행한 범죄의 야만성과 악랄성”에 대해 폭로하였으며, “일본반동들이 오늘도 《위안부》범죄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자체를 전면부정, 전면외곡”하고 있음을 비난
 - “역사적 사실은 일본은 납치문제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해자로 되었으며, 우리는 피해자로 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

조선신보,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범죄’ 규탄(3.7)

- 북한 당국은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조대위)가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에 강제 연행되었던 조선인피해자들과 관련한 명단에 기입되어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고베제강소주식회사 본사 공장’에 강제 연행되어 노예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범죄의 일단을 자료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밝힘.
- 3월 8일 발표된 조대위의 진상조사보고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경위에 대해 밝힌 다음 강제연행, 강제노동의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범죄는 국제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인권침해죄로서 일본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함.
 -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 범죄는 그 방법과 내용, 형식에 있어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 노예로동을 방불케 하는 특대형의 인권유린범죄”라고 비난
 - “조선인 강제연행 및 강제노동문제는 그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과거에 이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더는 미룰 수없는 초미의 인권문제, 인도주의적문제”라고 강조

로동신문,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 담화’ 보도(4.1)

- ‘조선인강제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도 3월 3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반동들이야

말로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비열하고 극악한 패륜패덕의 무리들”이라고 비난함.

민주조선, 일본의 ‘만경봉-92호’ 입항금지조치 규탄(4.1)

- “《만경봉-92》호는 조일 두 나라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협력에 의해 재일동포들의 조국래왕에 허용” 되어왔는바, 일본 정부가 “조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십자정신을 짓밟는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비난함.
 - “《만경봉-92》호를 조국방문의 주요교통수단으로 리용해 온 재일동포들 특히 고령자와 병약자, 장애자들이 조국방문과 육친과의 상봉을 사실상 단념”했다고 설명
 - 일본 정부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반공화국제재조치의 과녁”으로 삼아 인권과 생활권을 유린한다고 비난

민주조선,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성명’ 보도(4.3)

- 북한의 해외동포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가 3월 27일 《재일동포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만행은 야만적 범죄행위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함.
 - “일본당국은 총련 중앙회관을 강탈하기 위해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강제수색, 불법폭행, 련행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역설

조선신보, ‘재일교포 공동호소문’ 보도(4.4)

- 교토에서는 “일본사람들 250여 명(단체포함)이 찬동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공동호소문》”이 발표됨.

민주조선, 일본 내 ‘대북제재철회 및 재일교포 탄압중지 집회’ 보도(4.14)

-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다마 등지에서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 외에도 관련 일본인들이 참가한 집회를 열어 “대조선제재조치 철회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 인권침해 중지”를 요구함.

3. 유엔에 대한 반응

조선신보,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인권결의안 비난(4.9)

-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외무성 대변인의 답변 형식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함.
- 3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에서 “조선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유령같은 특별보고자의 임기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었는바, 이는 “미국의 반조선 책동에 편승한 EU와 일본이 주동이 되어 일부 불순세력들을 끌어모아 겨우 강압 채택”된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정치적 모략문서”라고 비난하고, 이를 전면 배격할 것임을 밝힘.
 - “인권의 정치화와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조선 《결의》채택 높음은 존엄 높은 조선의 영상을 훼손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없애버리려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
 - “이미 사멸된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의 유물인 개별적 나라들에 대한 특별보고자 제도 유지를 강요하는 《결의》는 모든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리사회의 보편적 심의기능을 파탄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 “인권문제에 대하여 논한다면 응당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과 민간인 살육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특대형 인권유린국인 미국과 과거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온갖 인권유린행위들이 만연되고 있는 서방나라들이 문제시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 반박

4. 남한에 대한 반응

민주조선, 한국 내 사례를 인용 국가보안법 철폐의 정당성·필요성 주장(1.29)

- “남조선의 《보안법》폐지 국민련대”가 “1월 23일 《사진작가 리시우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고 밝힘.
 - 성명은 “지난 10일 검찰당국이 리시우에게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데 이어 압수해간 그의 작품, 사진들을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바, 이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규탄

- “리시우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분렬의 고통을 더해 주는 침략적인 미군기지를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학문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주장
- “10·4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국민대다수가 평화와 통일을 념원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 되어야 한다고 촉구

조선신보, 한국정부 북한인권문제 거론 반발 보도(3.12)

- 북한 당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에서 한국정부 대표가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북인권문제》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조선의 국제적 권위와 영상을 깎아 내리고 조선의 제도를 흔들어버려고 날조해낸 모략의 산물”이며,
 -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책동에 추종하여 유엔무대에서까지 분별없이 날뛰고 있는 것은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반민족적인 정체를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
 -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북한인권문제 거론은 북남대결에로 몰아가는 망발”이라고 반발

로동신문, 대북방송 비난(3.16)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은 대북 방송이 인권문제를 알리고 북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전복할 수 있다며 열린 북한 방송, 북한선교방송, 북한개혁방송, 자유의 소리방송 등을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난함.

로동신문, 민가협 보안법 폐지 요구 보도(3.18)

-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13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700차 목요집회를 가지고 악법폐지와 인권문제 해결을 요구” 했다고 보도함.
 -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현 《정부》하에서 《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량심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개탄”하고, “악법폐지와 량심수 석방을 위한 각계의 투쟁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언명”

민주조선, 보안법위반 전교조 교사 보도(3.26)

- “남조선의 《보안법폐지, 김형근교사 석방 전북대책위원회》가 1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전라북도 지역의 각계 인사 590여 명의 명의로 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 “공안당국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이미 력사의 무덤 속에 묻혔어야 할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교육 활동을 벌려온 《전교조》소속 교원 김형근을 구속”하고, “전화도청, 컴퓨터와 우편물검열 등 그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비밀리에 감시하는 인권유린행위를 감행”한다고 비난
 - “《보안법》을 앞세운 공안당국의 탄압기도는 국민들의 항거에 부딪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

로동신문, 남한 보수정권 비난(4.1)

-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인민들의 련북통일기운을 거세하고 그들 속에 반복 대결감정을 고취하기 위해 진보통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놀음을 벌리고 있으며 외세와 결탁하여 북침전쟁 연습과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난.

로동신문, 한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 비난(4.1)

- “《개방》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우리의 체제를 건드리는 것은 서로 비방중상하지 않으며 내정간섭하지 않기로 한 북남관계의 기본원칙조차 모르고 설치는 주제넘은 처사”라고 비난함.
 -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거들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인 동시에 동족사이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대결어로 몰아가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범청학련 보안법 폐지 요구 보도(4.4)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 남측본부가 3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안법》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밝힘.
 - 범청학련남측본부는 “악법에 의해 이 땅에서 지금도 민주와 인권이 무참히 유린, 말살되고 통일운동이 탄압 당하고 있는바,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보안법》에 의해 6·15공동선언 리행을 위해 투쟁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청년 학생, 통일애국단체들이 《리적단체》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고 있는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 채택으로 통일의 밝은 앞날이 열린 이때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

로동신문, 이명박 정부를 ‘파쇼독재세력’으로 비난(5.1)

- “리명박패당은 저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벌써부터 민심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현실은 남조선사회야말로 인민대중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인권의 불모지, 민주의 폐허이며,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인권과 민주를 유린말살하는 파쇼독재세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비난함.

조선신보, 한국의 국가보안법 개정 철폐 국제적 여론 보도(5.16)

- “남조선의 《국가보안법》개정, 철폐를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바,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인권리사회 회의에서는 미국대표들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유린 상황을 문제시하고 비난해 나섰다”고 밝힘.
 - 회의에서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국가보안법》이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위협하는데 람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였으며, “남조선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지적
 - “미국무성은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유엔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이 악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이라 언급
- 또한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제네바주재 조선대표부 참사도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였으며, 북한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대표들도 《국가보안법》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보도(6.1)

-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인 ‘조국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조국통일연구원 백서’에서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난함.

- “남조선의 리명박역도”는 “《비핵, 개방, 3000》을 정당화해 나서고 있으며 반공화국 《핵소동》과 《인권소동》에 더욱더 매달리고” 있는바, 이는 “결국 6·15를 날려 보내고 북남관계의 판을 깨겠다는 것 외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비난

5. 분석 및 평가

미국과 일본을 주요 대상으로 한 비판적 대응 지속

-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특대형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강하게 규탄, 비난함.
 - 미국을 “인권범죄의 주범”이라 규탄하고, “인권법정의 피고석에 끌어내어” 처벌할 것을 강하게 촉구
 - 북핵문제와 관련지어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있어 ‘정치적 저의’가 있음을 비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 등 인권관련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관련 내용들을 인용하여 미국의 대내외적 ‘인권유린행위’를 규탄
 - 일본의 재일교포 탄압행위를 국제인권법규를 위반한 인종차별,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

‘헬싱키 프로세스’ 적용 가능성 제기에 대해 강하게 반발

-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유효한 접근법의 하나로 ‘헬싱키 프로세스’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당국이 비판적으로 반응함.
 -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한 것에 대해 냉전시기의 전략이며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난
 - 6자회담과 인권문제개선 연계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31
2. 납북자·국군포로	35
3. 이산가족	38
4. 분석 및 평가	40

1. 탈북자

러시아 내 탈북자, 유럽망명 추진(1.3)

- 시민지원(Civil Assistance)에 따르면, 2007년 11월 초 러시아 당국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던 중 보호시설을 탈출한 탈북자 정금철은 유럽망명을 추진하고 있음.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 아래 러시아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함.
 -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러시아 국적인 정씨 부인의 국적 변경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유로 망명신청에 대한 답변을 미루자 유럽망명 추진

라오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 탈북자 2명, 남한 입국(1.9)

- RFA는 라오스 주재 스웨덴 대사관에 머물러 있던 탈북자 2명(20대 중반과 30대 초반인 남자 탈북자 2명)이 한국에 입국(2008.1)하였다고 보도함.
 - 스웨덴 정부가 라오스와 마닐라 등의 아시아 지역 일부 공관을 2008년 8월 중순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한 뒤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서둘러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으로 평가

태국, 탈북자 14명 체포(2.26)

- AFP는 태국 경찰이 불법 입국 북한주민 14명(17~66세의 남성 4명, 여성 10명)과 태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함.
 - 탈북자들은 중국을 거쳐 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되었고, 함께 검거된 태국인들은 방콕으로 가는 단체 승차권을 구입하다가 현장에서 체포
 - 태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장기간 감금하는 대신 일정한 조사절차를 거친 뒤 한국 등 제3국으로 보낼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서해상 표류 중 구조된 북송 북한주민(2.8) 전원 처형설 제기(2.18)

- 정부 당국은 합동심문 결과 표류 중 구조된 22명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북송은 없었다고 전함.

- 북송 주민들은 설 연휴를 맞아 조개나 굴 등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승선했으며, 북한 해상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로작업을 벌였다고 진술
- 구조된 현장에서도 조난에 의한 단순 표류일 뿐 귀순의사가 없다고 말해 현장에서 돌려보낼 수도 있었지만 인원이 많고 여자들도 있어서 인천으로 배를 끌고와 합동조사 실시
-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들이 합동 심문한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어 북송한 것으로 발표

국내입국 탈북자들, 유럽지역 망명신청(3.17)

- 노르웨이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2006년 26명, 2007년 72명으로 세 배 증가함.
 - 망명신청자 중 상당수는 국내에 정착했던 한국 국적자이거나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으로 알려짐.
 - 노르웨이 정부는 망명심사자들에게도 임시 아파트를 제공, 1인당 600달러 정도의 생활비 제공 등 관대한 난민 지원 정책으로 탈북자들이 망명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노르웨이 당국의 망명심사는 매우 엄격하여 2007년 망명신청자 72명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7명에 불과함.
 - 상당수가 한국 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 상당수 탈북자들은 신분 서류를 위조하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적이 없었다”는 거짓말이 탄로나 난민지위심사 중도 포기

태국경찰, 밀입국 탈북자 8명 체포(3.15)

- 피롬 수타 중령은 북부 치앙라이 주(州)에서 방콕 행 버스를 타고 있던 남성 1명과 여성 5명, 여자 어린이 1명 등 탈북자 8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 태국 국경경찰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달간 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말함.

28개 탈북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창립(3.18)

- 자유북한인협회,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등 28개 탈북자단체는 흥사단에서 ‘탈북인단체총연합회’ 창립대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한창권씨를 선출함.

캐나다 이민난민국, 2007년 난민신청 탈북자 109명(3.26)

- 1996년부터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시작해 2003년에 2명, 2004년에 없고, 2005년에는 1명이 신청했으나 2006년 들어 25명의 탈북자가 난민신청을 한 데 이어 2007년에는 무려 109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절반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로 알려짐.
 - 19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는 모두 170여 명으로, 이 가운데 4명(2000년-1명, 2003년-1명, 2005년-1명, 2007년-1명)이 캐나다 난민 자격을 얻어 현지 정착

태국 밀입국 탈북자, 지난 3년 사이에 10배 증가(3.26)

- VOA는 태국정부 공식통계를 통해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2005년 1백 89명에서 2006년에 7백 29명, 2007년에는 1천 7백 67명으로 3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힘.
 - 태국 이민국수용소에는 2007년 11월 현재, 적정 인원 2백~3백 명보다 훨씬 많은 4백 24명의 탈북자들이 수용된 상태
 - 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밀입국자들을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아 북송된 탈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힘.

탈북자 12명,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진입(3.27)

- VOA는 중국을 거쳐 두 달 전 라오스에 도착한 탈북자 12명(9명: 두 달 전 도착, 3명: 3월 26일 도착)이 비엔티안의 한국대사관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힘.
 - 이들 탈북자는 ‘국경없는 인권(HRWF)’ 관계자와 면담 후에, 현지시각으로 27일 오전 11시 55분쯤 한국대사관에 진입했으며, 한국대사관은 현재 이들에 대한 정치적 망명 허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힘.
 - ‘국경없는 인권’(HRWF),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ISHR) 등 인권단체들은 “12명의 탈북자를 면담한 결과, 국제난민 지위에 적법하다고 판단돼 한국대사관 진입을 도왔다”면서 “라오스 정부가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안전하게 출국하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힘.

태국 장기 체류 탈북여성 2명, 미국행(6.13)

- 태국에서 출국 허가를 내주지 않아 1년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던 30대 초반의 탈북여성 2명이 12일 밤 태국을 출국, 인천공항을 경유해 13일에 미국으로 입국 예정임.
 - 미국행 탈북여성 중 1명은 태국 체류 기간에 한국계 미국인과 만나 결혼을 약속
 - 아이는 아버지와 미국에 이미 입국한 상태로 알려짐.

탈북자 5명, 추가 미국 입국(6.19)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태국 현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6월 안에 추가로 5명이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며 “태국 내 탈북자들의 미국행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보도함.
 - 태국 내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은 태국의 미국행 출국허가 지연으로 2007년 2월 12명이 미국으로 간 이후 1년 4개월 여 동안 이뤄지지 못했음.
 - 미국행 탈북자는 20~30대의 남성 1명과 여성 4명이며, 1명은 교회에서, 4명은 미국 비정부기구(NGO)가 운영하는 안가에서 최대 2년 이상 대기 체류
 - 탈북자들은 미국행 추방절차를 밟기 위해 18일 오후 태국의 본부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

진영 의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 마련(6.30)

-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들과 공동발의 형식으로 제출할 예정임.
 - 정부는 2007년 6월 21일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은 후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주민번호 때문에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지에서 직접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그 이전에 교육을 마친 탈북자 9천여 명의 주민번호 변경은 입법사항
 - 정부방침이 바뀐 2007년 6월 이전에 하나원 정착교육을 마치고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부여받은 탈북자 7,500명은 남성의 경우 125****, 여성의 경우 225****로 시작되는 주민번호 소지
 - 중국 정부는 주민번호로 탈북자들을 식별해 비자신청자에 대한 입국거부조치
 -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 일부 지역의 주민들도 탈북자들과 같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갖고 있어 중국 입국 심사나 비자 발급·연장 신청 때 출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출을 요구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음.

- 2007년 6월부터는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원이 아닌 정착지를 거주지로 변경

2. 납북자 · 국군포로

국방부, 유엔을 통한 국군포로 송환 결의 계획(1.13)

- 국방부는 ‘국군포로 문제의 실상과 대책’이라는 책자를 통해 ‘유엔총회 및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군포로) 송환 결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도록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며 유엔 결의는 특정 인권 위반국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원조 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국방부는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유엔인권센터에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청원할 수 있다며 이들 단체의 청원서 제출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2.12)

-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과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 납북자, 국군포로의 가족과 납북자 국군포로 등 483명 공동 명의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3.23)

- 전후 납북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위로금 액수를 심의하는 총리 산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2007.11.30 출범)’의 구성이 완료돼 4월 피해보상 계획임.
 - 통일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납북피해자단체 추천 몫의 위원이 선임됐다”면서 “이번 주 내로 총리의 최종 재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함.
 - 통일부는 납북피해자단체로 인정된 단체가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납북피해자단체’ 신청 공고를 냈으나 전후 납북자가족협의회만 신청(납북자가족모임은 미신청)

-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가 복수 추천한 인사 가운데 1명이 위원으로 선정됨.
- 정부교체로 국무총리 재가 과정이 지연되어, 4월부터 피해보상금 심사 및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
- 통일부 산하 납북피해자 지원단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피해자 보상신청을 받은 결과 3월 20일 현재 130여건 접수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 1차 의결(4.29)

- 납북피해보상지원위원회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납북피해위로금 지급 신청 31건을 심의했으며, 11억 500만원의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6.25 국군포로가족회, 국군포로 송환 촉구 대정부 성명서 채택(5.14)

- 귀환 국군포로 및 가족들이 포럼을 통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송환 국군포로 송환 문제 및 국군포로 2세들의 사회정착 문제 등을 국가 책무이행 차원에서 정부에 본격 제기함.
 - 탈북 귀환 국군포로 60명과 미귀환 국군포로 2세 180명 등이 회원인 '6·25국군포로가족회(회장: 이연순)'는 15일 '귀환 국군노병 생활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귀환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2세들의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5개항의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
 - 국군포로 가족회는 현충원에 안치된 억류지 사망 국군포로유해 5구와 향후 송환되는 유해들에 대해 생환 국군포로들과 동일한 전역식 거행과 함께 6·25전사자 유해 발굴 시 억류지(북한)에서 사망한 미귀환 국군포로 유해송환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
 - 귀환 국군포로들의 현 생활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정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
 - 현재 한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미귀환 국군포로 2세들의 가족 수는 61가족, 총 인원수는 180명

통일부, 조선일보 보도 납북 어부 사진 관련 13명 확인(5.19)

-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조선일보 보도(5.19) 납북자 31명 관련 “실명이 보도된 22명 중 13명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자 480명의 명단에 포함돼 있는 사람이지만,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납북자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힘.

- 납북자가족모임은 1960~1970년대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 어부 31명이 1985년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단체로 찍은 사진 공개
- 납북자가족모임은 사진은 “지난 3월 북측 사람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며 “사진 속 33명 가운데 북한 지도원 2명을 제외한 31명은 모두 납북 어부”라고 주장
- 가족모임은 귀환납북자를 상대로 사진 속 인물들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1975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 선원 박시동(당시 32세)씨 등 모두 23명(박영석, 정복식, 김용봉, 정철규, 최효길, 탁채용, 최영철, 김우성, 박 천, 서태봉, 손운수, 김성철, 홍성길, 박달모, 정건목, 배현호, 이성균, 윤종수, 이병기, 김의준, 김일만, 홍복동)의 이름을 확인했다고 밝힘.
- 정부는 “납북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시 증인들의 기억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풍랑 등으로 실종됐다가 나중에 납북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정확한 납북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 2차 의결(5.30)

- 납북피해보상지원위원회는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납북피해위로금 지급 신청 35건을 심의했으며, 10억 6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심의는 지난 1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납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지난 26일 개최된 ‘납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짐.

탈북 납북 어부 재북 가족, 북한 당국 체포(6.8)

- 1975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선 ‘천왕호’의 선원 윤종수(66)가 33년 만에 북한 탈출에 성공했지만, 아내와 외동딸은 북한당국에 체포됨.
 - 납북 어부는 5월 초 단독으로 두만강을 건너 5월 20일 중국 내의 한국 공관에 진입하여 보호 상태
 - 북한에서 결혼한 재일동포 출신인 아내(67)와는 양강도 혜산에서 헤어졌고, 딸(25)은 평안남도 개천군 체류
 - 딸은 가족이 전체로 이동할 경우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모 탈북 이후 뒤따라오려고 계획
 - 윤종수는 납북된 뒤 1976년 6월부터 평안남도 개천군 농기계작업장에 배치돼 2002년까지 근무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위로금 지급 3차 의결(6.30)

- 남북피해보상지원위원회는 제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남북피해위로금 지급 신청 30건을 심의하고 25건을 의결했으며, 7억 9천 2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심의는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남북피해조사 및 심사분과위원회’와 지난 30일 개최된 ‘남북피해산정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짐.

국군포로 김진수 탈북(6.24)

- 남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갔던 국군포로 김진수(74, 가명, 전북 완주, 전쟁 당시 일등중사)가 14일 두만강을 건너 55년 만에 탈북에 성공하여 제3국에 체류 중임.
 - 김진수는 1953년 강원도 금성지구전투 때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됐으며 남측에는 사망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으로 끌려가 평양에서 치료를 받은 뒤 40여 년 간 평북 일대에서 탄광일을 하며 1남 4녀를 둔 것으로 알려짐.
 - 재북 가족은 모두 살아있지만 동반 탈북하지는 못했고, 재남 가족은 형제들이 있으며 부모는 사망한 것으로 파악
 - 김진수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자신을 북한에 살고 있는 국군포로라고 밝히고 “현재 몸이 아파 불편하니 한국에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움 요청

3. 이산가족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2.5)

- 2007년 11월에 열린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올해 초 남과 북이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시험 교환한 뒤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이산가족 가운데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임.
 -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의 요청으로 이산가족 20가족씩의 영상편지를 판문점을 통해 교환할 것을 밝힘.

평양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미착공(2.11)

- 정부가 2007년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35억 원 상당의 현금과 건축자재 등을 제공했으나 북한은 최근까지 센터를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북측은 남측의 현장방문과 사용내역 제출 요청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북측은 남측의 요구대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관련물자 지원을 요청, 2007년 4월부터 8월까지 현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35억 원 상당의 현금과 건축자재를 제공함.
 - 통일부는 “우리 측은 협의과정에서 북측에 설비자재 제공 등에 따른 투명성 확보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계기시마다 강조했다나 북측으로부터 공사 진척상황 등의 명확한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힘.

남북 이산가족 6.15 특별상봉 무산 예상(5.21)

- 남북은 제9차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의 6.15 특별상봉과 분기별 화상상봉 등에 합의했으나 남북당국 간 대화 단절과 함께 적십자 간 ‘인도적’ 대화도 끊어지면서 이들 일정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 높음.
 - 6월 중순께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이산가족 특별상봉과 분기별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 연간 400여명 규모의 대면상봉 등에 합의했으나, 2월 20가족씩 영상편지 교환만 성사
 - 대한적십자사는 “영상편지 교환 이후 북측 조선적십자회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남측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관련 협의를 갖자고 제안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힘.
 - 통상적인 상봉준비소요기간(50~60일)을 감안하면 6월 중순 예정됐던 100명 규모의 6.15 특별상봉과 분기별 40명 규모의 화상상봉, 30명 규모의 영상편지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평가

4. 분석 및 평가

탈북자 국내입국 시도 증가

- 불안정한 체류여건으로 인해 국내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 경우 입국이 급증하고 있음.
 - 이민국수용소의 수용한계 등으로 인해 조속한 입국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인원이 크게 감소
 -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에 비해 장기간 소요
 - 미국은 관련국의 출국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매우 제한된 규모의 난민 수용

국내정착 탈북자의 해외망명신청 지속

- 우리정부로부터 정착지원을 받은 탈북자들이 국내입국사실을 속이고,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지역에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함.
 - 난민신청 탈북자들이 단기 급증함에 따라 관련국들의 대응조치들이 강구됨.
 - 영국의 경우 한국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요청
 - 유럽지역에서 이중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

납북피해자 보상 본격화

- 납북피해보상지원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 위로금과 귀환납북자에 대한 정착금 지급이 이루어짐.
 - 관련단체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위로금을 신청하는 가족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납북피해자지원단의 피해실태조사 체계화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귀환 시도 지속

-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이 납북자가족모임 등 관련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탈북하여 귀환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정부도 탈북 납북자 및 국군포로들의 신속한 입국을 위해 관련국과 협력체계 형성
 - 상당수가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의 신상 위험이 심각

귀환 국군포로 정착지원 요구 본격화

- 탈북 귀환 국군포로와 미귀환 국군포로 2세로 구성된 6·25국군포로가족회가 귀환 국군포로 및 국군포로 2세들의 사회정착 교육프로그램 마련, 유해송환, 송환추진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함.
 - 정부가 국군포로 문제를 포함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 마련 기대

이산가족상봉 사업 중단 장기화

-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됨에 따라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사안들이 1차례 화상상봉을 제외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평양이산가족화상상봉센터 지원물자 모니터링 거부 등으로 전용 의혹이 제기됨.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면회소에 대한 남측 직원의 파견 시기나 규모 등 운영 방안 및 준공식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지 못할 경우 이산가족상봉 사업 중단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제3권 1호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N HUMAN RIGHTS